

정부정책

산자부,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창출을 위한 3대전략 9대 정책과제 발표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한 50대 모듈 부품, 50대 소재 원천기술 확보

그간 대일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던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견실한 소재 중핵기업과 세계경쟁력 5위권이내의 모듈부품 생산 능력을 갖춘 부품 중핵기업이 앞으로 국내에도 다수 출현될 전망이다.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장관은 4월 5일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부품·소재 관련 산·학·연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 발표하면서, 소재 중핵기업과 부품 중핵기업을 양대축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보강하고 동시에 미래시장을 겨냥한 50대 소재 원천기술과 50대 모듈부품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 기술개발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품·소재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

1. 추진배경

국내 산업의 “호리병형 구조”를 허리가 강한 “항아리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중핵기업 성장이 관건이다.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중핵기업이 산업생태계에 다수 포진해야 수요대기업-중소기업 및 수출-내수의 양극화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부품·소재 발전전략 (2005.1월 VIP 보고)에서 글로벌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핵기업 발전 목표 제시

- 산업적 파급효과와 수출효과가 큰 중핵기업을 2010년까지 300개 확보



→ 중핵기업 특성에 맞는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과 세부 실천과제 도출을 위해 금번 대책 마련



2.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개념 및 기대효과

□ 중핵기업의 개념

- 기능적 측면 : 모듈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여 관련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술력 증대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
 - * 부품 중핵기업 : 모듈부품 생산, 수요대기업-중소기업(단위부품·소재) 동반성장 효과 탁월
 - * 소재 중핵기업 : 장기·대규모투자가 필요한 High risk high return 형 소재생산, 원천소재는 대일적자 핵심요체
- 규모적 측면 : 매출 2천억원 이상, 수출 1억불 이상(동시달성 조건)
 - * 대규모 R&D 투자 및 글로벌소싱의 참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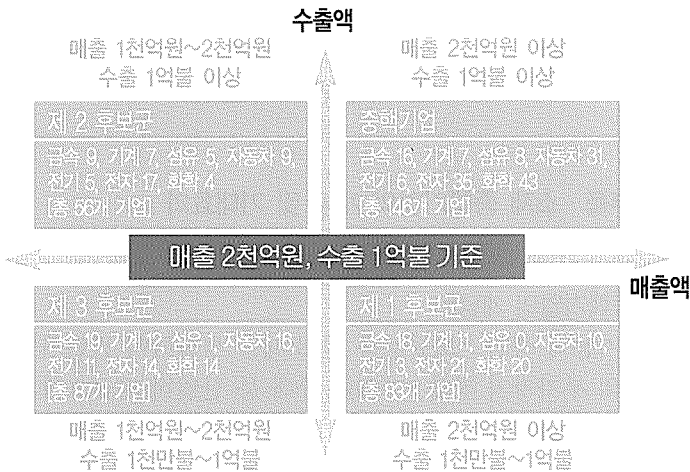
□ 중핵기업 성장의 기대효과

- ① 독자적 대형 R&D투자가 가능 → 부품·소재 핵심기술 확보
- ② 대·중소기업 가교역할 담당 → 항아리형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 ③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제품을 다각화, 공

급선 다변화 추진 → 수출 확대에 기여

- 매출 2천억원 및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부품·소재 중핵기업은 총 146개 (부품 90, 소재 56)
 - * 대기업 계열은 19개사
- 중핵기업 기준에는 못 미치나 2010년까지 중핵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후보기업은 226개 (부품 164, 소재 62)
 - * 대기업 계열은 8개사

3. 중핵기업 실태조사 결과 ('05.10월)



4.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전략과 과제

□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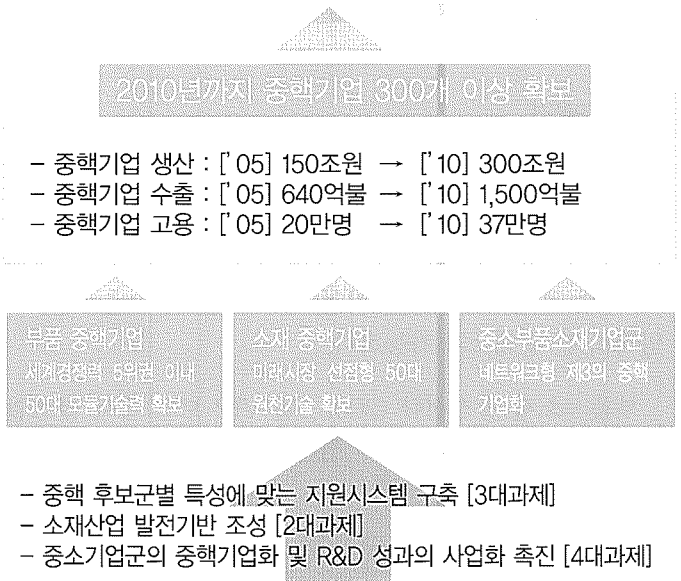
- ① 중핵기업 후보군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 후보군별 유형에 맞는 중점지원과제 발굴·지원
 - (제1후보군) :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 촉진
 - (제2후보군) : 기업규모 확대, 국내수요기반 확충
 - (제3후보군) : 매출·수출규모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
 - 장기·대규모 투자가 요망되고 리스크가 큰 소재분야는 별도 지원프로그램 강구

제 1 후보군	- 핵심기술 R&D 역량 확충 - 글로벌 핵심 네트워크 편입 촉진
제 2 후보군	- M&A 등 기업규모 확대 - 수요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제 3 후보군	- 기업규모 확대, 기술역량 확충 등 종합지원

- ② 중핵기업 성장의 관건인 사업화 지원 대폭 확대
 - 개발한 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화 금융공급 확대 및 개발제품의 실질적 구매기반 확충
- ③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지원체제 정비
 - 부품·소재 중소기업군의 혁신클러스터화를 통해 중핵기업화 촉진
 - 부품소재특별법령 정비 및 부품·소재지원예산 확대

□ 비전 및 목표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는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형 산업생태계 조성
 -3대전략 9대 정책과제-



전략 1: 중핵기업 후보군 특성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50대 모듈단위 기술개발과제 발굴·지원
 - 2006~2010년간 매년 핵심 모듈기술과제 10개이상 도출(2006년 100억원)
 - 수입대체효과보다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과제 중점 지원
 - 기술개발과제 민간투자비율 제한완화(정부출연금의 75% → 50%)
 - R&D 기획단계부터 특허확보 지향적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모듈부품 표준화 작업반을 가동
- 해외시장 개척 등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유도
 - 투자유치 해외로드쇼 및 부품·소재시장개척단 파견('06년중 각 4회),
 - 부품·소재 CEO Summit 출범('06.3월)을 계기로 주요국 경제단체와의 연계 강화
 - 대일 의존도 완화, 한·미기업간 제휴 확대 차원에서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 시장자율적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영업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M&A 활성화 여건 조성
 - 합병·분할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부품·소재특별법령개정 추진
 - 수·급기업간 전략적 제휴, 영업시너지 창출이 관건인 부품·소재분야 특성을 감안,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예외 인정 추진
 - *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본등 외국계투자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국내부품·소재기업(전자소재, LCD소재) 인수하는 사례 속출
 - * GE, Intel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부품·소재기업 지분에 전문투자하는 비금융권벤처캐피탈(GE Equity, Intel Capital)을 운영

전략 2: 소재산업 발전기반 조성

- 소재산업 특성을 감안, 부품과 차별화된 별도의 기술개발프로그램 도입
 - 금속·화학·세라믹 등 3대분야 미래시장 선점형 50대 핵심 소재기술 확보(가칭 “National Only One Material Project” 추진)
 - * 대일적자해소 등 수입대체소재 20개, 미래시장 창출 원천소재 30개
 - 선행연구(대학·연구소)와 응용연구(소재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5년이상 중장기 소재기술개발 프로그램 도입
 - * 선행연구는 소요자금의 100%까지, 응용연구는 75%까지 정부 지원
 - 2006년 시범적으로 10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지원예산을 확대
- 소재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
 - 소재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보관·제공하는 Materials Bank(소재정보은행)를 3대 허브에 설치('06년 20억원)
 - 3대 허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부품소재진흥원에 설치
 - * 3대 허브(안) : 금속(기계연구원), 화학(화학연구원), 세라믹(요업기술원)
 - 소재원천기술의 부품화를 촉진하는 부품·응용화센터(Solution Center) 구축

전략 3: 중소기업군의 중핵기업화 및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 부품·소재 중소기업군의 혁신클러스터화로 중핵기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과 연계, i-manufacturing 등의 모델 적용을 통해 공동 R&D·생산·물류·마케팅 등 시범사업 추진(2007년중 1~2

개단지)

* i-Manufacturing : IT를 활용하여 공정 개선, R&D·생산·물류·마케팅 등의 협업환경을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제조혁신 전략

□ 중핵기업 성장의 관건인 사업화단계(기술개발 소요자금의 10배이상 소요)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 ‘신기술산업 육성자금’ (‘06년 1.5조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06년, 732억원)을 활용, 개발된 기술의 생산설비자금 지원
- 사업화 초기 부품·소재기업에 집중투자 하는 “부품소재전문사업화펀드” 조성(모태펀드, ‘10년까지 1,000억원 조성 목표)
- 부품·소재진흥원이 추천하는 R&D 성공기업에 대해

기술담보 원칙으로 은행이 용자하는 협력약정 확산

* 부품·소재진흥원-기업은행간 전략적 업무제휴 약정 체결(‘06.3.3)

- 개발리스크를 축소하고 민간투자자금의 유입 촉진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프로젝트 금융기법 도입 검토

□ 부품·소재기업 전문인력 확보

- BK21 지원대상 선정시 부품·소재분야 산·학·연 컨소시엄에 대해 평가 우대(선정시 가점 3점)
- 부품소재기업의 전문인력 확대를 위하여 병역특례 우대(기업 지정시 가점 10점) 적용
- 부품소재통합연구단 소속 21개 공공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1년간 전담 지원(‘06년 200억원)

전자여권, 전자운전면허증도 IC카드 기반의 국가표준으로 개발

기술표준원, 금년중 전자여권등 5개 중점분야 국가표준 개발

세계적인 보안강화 추세에 따라 교통, 의료, 금융 및 개인식별카드 등 관련분야의 IC카드화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최근 국제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전자여권, 선원신분증, 전자운전면허증과 전국 호환 교통카드 및 위·변조 불가능한 개인식별카드(전자주민증) 등 5개 IC카드 응용분야에 대한 국가표준 개발이 금년 중 추진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김혜원)은 IC카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표준 초안개발에서부터 최종 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표준화 과정에 정부기관 및 민간 기술개발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갖추고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기술표준원은 민·관 표준화 협의기구인 「생체인식응용산업표준화협의회」 및 「교통카드호

환표준화협의회」를 구성(‘05.6월)하여 표준화과제 발굴 등 국가표준화 로드맵을 완성하였고, 민간 사업자 중심의 기술통합 및 표준(안) 개발을 위한 「IC카드 연구센터」를 설립(‘06.2월)하여 상호 협력적 국가표준 개발 체계를 마련하였다.

국제적 통용이 필요한 전자여권, 선원신분증, 전자운전면허증에 대한 국가표준은 기본적으로 ISO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의 국제적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국가간 상호호환성을 갖출 예정이며, 국산 표준시스템 개발 완료 후 국제적 테스트세션을 국내에 유치(‘06.11월)하여 각국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여부를 검증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년 동안 전국적 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교통카드 분야 표준화는 현행 교통카드 사업자가 참여한 「교통카드호환표준화협의회」를 통하여 통합표준 개발의 필요성을 상호인식, 국가표준 개발에 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